

<첨부>

「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」 건의문 요약

연번	과제명	현황 및 문제점	건의내용
I. 입 지			
1	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	-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은 중소·벤처기업만 설립할 수 있음 - 중견기업은 도시형공장 설립규제로 공장설립이 어려워 투자활동이 위축	- 중견기업도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
2	자연보전권역 공장신설 및 증설 규제 완화	-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·증설 또는 이전, 업종 변경 행위 제한 -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규제,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로 공장증설이 어려움	- 상수원 보호와 관련 있는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하고,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기업의 경우 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
3	계획관리지역에 인접한 생산관리지역 용도변경 규제 완화	- 계획관리지역 인접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설이 제한되며, 공장건설시 토지용도 변경 필요 - 용도변경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공장 증설 불가능	- 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 및 건축물 행위규제 완화
4	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처리지침 하달	-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시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- 지자체는 농지법상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고수하고 있어 공장 설립 및 투자에 어려움	- 지자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하달
5	농지전용 규제 완화	-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 규제하고 있음 - 농지전용 규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떨어뜨리고 농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	-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전용 규제 완화
6	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규제 완화	-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및 신규시설 확장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법상 토지 용도규제 - 비현실적인 용도규제로 신규투자가 어려움	-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 규제 완화
7	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심의 일원화	-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함 - 중복 심의에 따라 신발전지역 개발 지연	- 중복 심의 규정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일원화
8	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설치기준 일원화	-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설치기준이 서로 상이함 - 기준 불일치로 인해 사업부 내 토지이용, 설비개선 및 증설이 어려움	- 지자체 기준을 정부 기준으로 일원화
9	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 일원화	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- 환경부 권고안과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로 축사증축 과정에서 마찰 발생	-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제 일원화
II. 노 동			
1	통상임금 부담 완화	-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-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	-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“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”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
2	근로시간단축 노·사 자율에 맡겨야	-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- 근로시간단축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인건비 상승 및 생산차질 유발	- 노·사 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
3	임금피크제 법제화	- 정년 60세로 의무화 -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	-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법제화

연번	과제명	현황 및 문제점	건의내용
4	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	-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 등을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소기업 중심 배정 - 초기 중견기업과 지방소재 중견기업은 국내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인력 신규채용도 어려움	- 구인난이 심각한 중견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및 고용한도 상향 조정
5	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	-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은 종업원 수 대비 일정비율('14년 2.7%)의 장애인 의무고용, 위반시 고용부담금 부담 -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고용을 강제하고 있어 기업부담 증가	- 업종별로 의무고용률 차등적용 및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
6	전문연구·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요건 완화	-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'13년부터 대기업 배정 전문연구요원 쿼터 폐지 -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업성장에 애로	-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명확화

III. 세 제

1	중견기업, 계열사 간 거래 과세부담 완화	- 계열기업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부과(중소기업 간 거래 제외) - 계열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투자위축, 기업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 저해 - 특히 정부의 계열화 촉진 정책으로 계열화한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어 정책신뢰성 하락	- 중견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
2	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상향	-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후 10% 세율 과세 -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인데 증여한도는 30억원으로 터무니없이 작음	-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한도 상향조정
3	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	- 안전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3%(중소 7%) 공제 - 산업안전 및 화학안전 시설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, 공제 대상 확대 및 중견기업 구간 신설을 통해 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	-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 5%로 확대하고 공제 대상에 화학안전 시설투자 포함
4	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	-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3%(중소 7%) 공제 -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	- 중견기업 세액공제 5%로 확대 및 일몰연장
5	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	-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수가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-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조세지원 확대 필요	-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
6	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시 과세 제외 및 자진신고제 도입	- '01.7월 상법 개정 전 법인 설립시 발기인 수(3인 이상) 규제로 명의신탁을 통해 법인 설립 - 명의신탁 전환시 사실 입증 곤란, 증여세 부담 증가,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명전환이 어려움	- '01.7월 상법 개정 이전 설립 법인에 대해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 대상 제외 또는 자진신고제 도입
7	설탕 할당관세 물량 확대 및 관세율 인하	- 설탕은 할당관세를 적용, 매월 업체별로 쿼터량 한도를 설정하고 중소기업 배정 후 선착순 배정 - 할당관세 물량을 제외하면 관세율이 30%가 적용되어 제과업 등 설탕을 원료로 하는 기업의 비용 상승	- 할당관세 물량 확대 또는 기본관세율 인하
8	버터에 대한 양허관세율 인하	- 버터 수입시 최고 89%의 양허관세를 부과 - 관세가 낮은 가공버터(할당관세율 4%)를 대체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	- 버터에 대한 양허관세율 인하
9	치킨 양념첨가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	- 닭고기에 소금 이외에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 과세 -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명점 사업자가 세금문제로 직접 양념을 하고 있어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	- 닭고기 양념에 부가가치세 면제

연번	과제명	현황 및 문제점	건의내용
IV. 금 융			
1	주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 0.075% 이상인 기업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여 관리 - 기업집단 감독강화 규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- 주채무계열 지정시 신용등급 하락,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 재무구조 악화 	- 주채무계열 제도 폐지
2	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은 폐지했으나, 법인은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하도록 규정 - 연대보증 요구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 위배 	- 법인의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폐지
3	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은 폐지했으나, 법인은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하도록 규정 - 연대보증 요구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 위배 	- 법인의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폐지
4	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 자회사의 공장건설 및 투자시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며, 현지금융기관은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 요구 - 지급보증은 사실상 출자금과 동일한 성격이나 국제거래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발생 	-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시 국제거래에서 제외
5	환변동보험, 중견기업 한도 상향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운영 - 거래한도가 작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견기업은 실익이 없음 	- 거래규모 한도 상향조정 및 보험료 지원확대
6	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의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 변경,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시 사전신고 의무화 - 해외사업활동 사전 변경신고 의무화는 중견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을 저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용변경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-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등에 대해 변경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후보고로 전환
7	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직접투자시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투자를 해야 함 - 중견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및 해외진출 저해 	-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개선
8	신고의무 위반시 외국환거래정지 처분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벌 혹은 과태료부과 및 외국환 거래정지 처분 - 2009년 법 개정 전 위반행위(ex: 30년전)에 대해서도 외국환 거래정지 - 형사벌 혹은 과태료에 외국환거래정지 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중복처벌 	- 외국환 거래정지 처분을 폐지하거나, 2009년 법 개정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외국환 거래정지 처분 발령
V. 공정거래·판로			
1	중견기업,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, 확장자제·진입자제·사업축소 등 권고 - 중견기업, 특히 업종전문기업도 규제받아 피해 증가 - 일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민간 및 공공시장에서 경쟁 중견기업을 축출하려는 악용사례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안) 적합업종 규제 대상인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정의 - (2안)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,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
2	하도급 대금지급 기간단축으로 중견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60일 이내에 대금지급 - 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에는 빨리 주고 대기업으로부터는 늦게 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 증가 	-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하도급 대금 결제기일 보장
3	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공정거래, 하도급법 위반, 수위탁거래위반, 입찰담합,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 -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가 광범위하고 중복처벌 및 과중처벌로 인해 기업의 생존에 까지 위협 	- 과실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

연번	과제명	현황 및 문제점	건의내용
4	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 완화	-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- 사인(私人) 간 거래행위 제한은 계약자유 원칙 위배 - 행정법규 위반이나 탈세행위의 경우에도 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발생	- 계약 갱신은 계약자유 원칙에 맡기거나 행정법규 등 위반시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포함
5	블랙컨슈머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마련	-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에 대한 악성민원 소비자 증가로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음 -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할 경우 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	- 블랙컨슈머의 허위정보 유포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 도입

VI. 인증·검사

1	창세트 부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방식 개선	- 창세트 제조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납품해야 함 - 실측을 통해 기본모델 인증 기업만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파생모델을 인증을 받을 수 있음	- 인증시 실측 방식과 시뮬레이션 방식 모두 허용
2	방폭 전기기계 안전인증 규제 완화	- 방폭지역내 전기기계 사용시 국내 안전인증 외에 IECEX 인증만 인정하고 있음 - 북미, 유럽 안전인증 제품도 국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 설비개선 및 신·증설 투자에 어려움	- 해외 안전인증 제품 국내 안전인증 면제 * 북미: NFPA ISA-UL-FM-CSA 유럽: CENELEC-EN
3	축산물 친환경 인증 통합	- 축산물 및 동물 관련 HACCP, 친환경 축산물 인증, 동물복지 인증, 환경 친화 축산농장 등이 있음 - 다양한 인증제도와 복잡한 인증절차로 기업 부담 증가	- 축산물 친환경 관련 인증제도 통합 및 인증절차 간소화
4	가금류 도축 검사공영화 제도 개선	- 가금류 도축 검사공영화 시행으로 공무원인 검사관과 검사원이 도축검사를 수행 -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 증가 - 검사 수수료 납부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	- 가금류 검사공영화 폐지
5	도축 검사원 자격기준 폐지	- 검사원의 자격은 일정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 - 검사 보조업무는 자격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	- 검사원의 자격기준 폐지

VII. 주택·건설

1	보증기관의 면책채권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	- 통합도산법은 면책채권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 - 일부 보증기관은 면책채권에 대해 채무변제를 강요하거나 보증을 거절하고 심지어 계열기업까지 보증을 거절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애로	- 보증기관의 면책채권에 대한 차별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
2	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중복성 심사 일원화	- 발주청은 100억 이상 공사 발주시 타당성(설계VE)을 검토해야 하며, 각 지자체도 계약원가 심사를 해야 함 - 중복심사로 행정업무 부담 증가 및 공사 발주 지연	- 중복성 심사 일원화
3	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중복규제 완화	-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법에 따라 신고할 경우 건설공사기술용역을 수행했으나,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예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추가 등록해야 함 - 추가 등록은 중복규제에 해당	-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예외 인정

VIII. 기 타

1	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정의 명확화	- 대기업인 SW사업자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공SW사업금액 하한을 두고 있음 -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판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	- 대기업 SW사업자 기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명확화
2	방화구획 설치 완화 규정 구체적 명시	- 일정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며,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를 완화하고 있음 - '13.11월 감사원 지적 이후 설치 완화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·적용하여 공간의 비효율적 이용 및 건축비 상승 등 기업의 부담 증가	- 방화구획 설치 완화 규정 구체적 명시

연번	과제명	현황 및 문제점	건의내용
3	관계기업제도 적용 완화	- 지배·종속 관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 - 관계기업은 '15년부터 유예기간 적용하나 기적용 기업의 경우 차별대우를 받게 됨	- 관계기업제도 시행으로 기 졸업 기업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소급 적용
4	에너지 사용제한 규제 완화	- 하·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-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기간 내 대규모 집중 생산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전기 사용 제한으로 부담 증가	- 생산 물량 집중되는 기업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예외 범위를 설정하거나 의무감축률 하향 조정
5	선원 승하선 공인시 민간보험 가입자 차별대우 시정	-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- 항만청 선원 승선 공인 신고시 민간보험 가입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보험선택권 제한	- 선원 승선 공인 신고시 민간보험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
6	수출품목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완화	- 법규준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수출입 검사 및 절차간소화, 납세유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- 수입신고는 잠정가격신고제를 두고 있으나 수출신고는 잠정가격신고제가 없어 수출정정신고시 법규준수도가 낮게 평가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	- 법규준수도 측정시 수출신고 정정에 대해 감점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
7	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수입절차 간소화	- 축사용 수입 가스난방기기 사용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함 - 사실상 축사용 난방기기 수입 규제에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기업부담 증가	- 축사용 가스 난방기기에 대해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절차 폐지
8	초기 중견기업, 지방자단체 육성기금 지원 확대	- 지방 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육성기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 - 초기 중견기업은 공장이전이나 사업 확장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	- 자금지원 대상에 초기 중견기업 포함
9	부산신항만 부두내 벌크선 접안 부두 설치	- 부산신항만은 당초 다목적 부두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컨테이너 전용으로 용도변경 - 대용량 벌크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없어 기업의 물류비용 급증 및 정책 신뢰성 하락	- 부산 신항만을 컨테이너 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벌크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 개설